

숙련창업 기업 지원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

정현태* | 금융위원회



- I. 연구배경
- II.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정책 현황
- III. 숙련창업의 개념 및 지원 필요성
- IV. 숙련도별 창업기업의 부실률 및 고용창출 현황 -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중심
- V. 정책적 시사점 : 숙련창업 활성화 방안

* E-mail : 정현태(email: jht99@daum.net)

연구초록

숙련창업 기업 지원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

정 현 태

지금까지 정부는 과도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청년창업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률과 전문성은 높지 않다. 반면 '시니어 창업지원센터' 외에 전문적인 지원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의 창업 성과는 뛰어나다. 중장년층이 창업 전에 동일한 업종에서 숙련된 경험을 쌓은 후 창업하기 때문일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구조조정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실직 등 정책 환경은 숙련된 경험자의 창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동 업계 경력에 따라 5년 이상인 경우 숙련창업으로 구분하고 11~12년에 신설된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숙련정도에 따른 기업의 부실률과 고용창출 현황을 비교했다. 그 결과 비숙련창업기업에 비해 숙련창업기업의 설립 5년 후 부실률이 8.4%p 더 낮고, 기업 당 1.58명을 더 고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창업자가 숙련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보증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숙련창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숙련창업, 청년창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1. 연구배경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지 이제 1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직접 일자리창출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¹⁾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등 일자리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시작된 전체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는 창업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 4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 중 20%인 8000억원을 청년창업 활성화에 배정하는 등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창업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여전히 창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하기 보다는 소매·요식·숙박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의향이 높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심화,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붕괴 등 정부가 처한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다.

그러므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도 제한된 예산 하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표현은 9988 이다. 통계청의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표현으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구성하고 있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측정하는 기관 및 통계 산업 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II.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정책 현황

1. 과거 10년간 정부의 주요 창업 지원 정책

창업은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창업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²⁾하여 왔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흐름을 일련의 키워드로 살펴보면 ‘창업환경 개선’, ‘기술’, ‘글로벌’, ‘청년’, ‘투자’, ‘규제개선’, ‘효율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창업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부가가치 창출력이 큰 기술 및 글로벌 창업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였다. 2012년 5월에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을 설립하는 등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3년 7월 코빅스 시장을 설립하는 등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환경 구축에 힘썼다. 또 부처별로 산재한 창업 지원 사업을 K-스타트업으로 집중시키는 등 효율화에 집중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짐에 따라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창업’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대 복합·혁신과제의 두 번째 꼭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선정하였고,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사업화 및 지원 강화,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 추진 등을 발표하였다. 창업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폐지를 추진하는 등 창업 실패 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재정적으로는 2017년 중앙정부 기준으로 투·융자·보증을 포함해 25조원 이상을 창업활성화에 지원³⁾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중 20%인 8,000억원을 청년창업 활성화에 배정하였다.⁴⁾

2) 양현봉(2017),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I-KIET산업경제이슈 제37호, 산업연구원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2017년 창업지원사업에 적시된 지원규모 합산

4) 국회예산정책처(201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표 1 〉 과거 10년간 정부의 주요 창업 지원 정책

정책명	시기	주요 내용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	'08. 4 '08. 8	- 최저자본금 폐지 등 절차 간소화, 창업초기 비용부담 완화 등 창업환경 개선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08. 6 '08.11	- 아이디어 상업화 및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 등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대책	'09. 3	- 아이디어 기반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벤처창업 및 성장 촉진대책	'09.11	- 벤처 창업 후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 수립
글로벌 창업 촉진 대책	'11. 4	- 글로벌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방안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	'10. 8	- 녹색 기술 등 분야별 청년 창업자 육성
2012년도 청년창업 지원대책	'12. 2	- 청년 창업자금 11년 대비 2.5배로 대폭 증액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화 방안	'13. 5	- 코넥스, 크라우드 펀딩 등 창업자금 조달 환경 개선
벤처·창업 규제 개선 방안	'14. 3	- 창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방안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15.10	- K스타트업으로 창업지원 창구 단일화 등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17. 4	- 창업단계별 지원, 연대보증면제 확대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17.11	- 10조원 규모 혁신모험 펀드 조성, 사내벤처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대책	'18. 3	- 청년 창업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 민간주도 창업사업(TIPS) 확대 등

자료 : 정부(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리

2. 연령별 창업 및 생존률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창업지원은 대체로 청년 창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면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청년들의 창업활동과 청년창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자.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창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창업활동은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청년들의 창업태도가 부정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중 5%만이 졸업 후 진로로 ‘창업’을 꼽았고 전문대 재학생들의 창업 의사는 0%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의 ‘2017년 창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41.7%가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지식과 능력, 경험 부족을 창업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창업 시도가 적극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 5년간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후 업력 1년이 된 기업 중 20~30대 청년창업 비중은 최저 12.1%(2014년)에서 최고 25.5%(2013년) 수준을 기록했다. 창업지원 정책의 주 대상이 20~3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다.

〈 표 2 〉 창업자 연령별 비중(업력 1년기업)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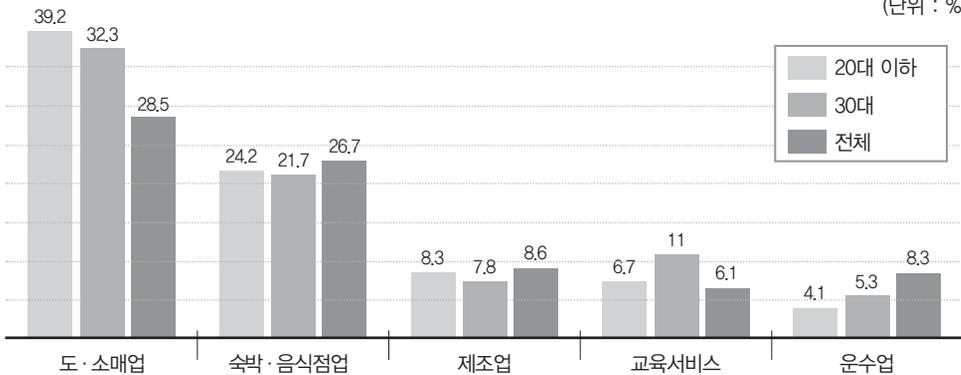
조사연도	전체 창업 (개인+법인)	연령별 비중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2013	422,842	25.5	33.6	37.0	13.5
2014	410,441	12.1	34.1	37.4	16.4
2015	479,684	19.0	34.5	32.2	14.3
2016	486,226	25.2	31.3	27.9	15.7
2017	520,297	22.6	31.6	29.4	16.4

자료 :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실태조사 2013~2017년

또한 청년들이 뛰어드는 창업시장 역시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다. 2~30대 청년 사업자들은 특별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 요식업, 숙박업을 창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20대 창업자의 63.4%, 30대 창업자의 54%가 이에 해당하였다(〈그림1〉 참조). 언론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진 푸드트럭 창업 열풍 등도 이러한 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1 〉 국내 창업 5대 업종

(단위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대 청년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2017년
 주) 2013~2015년 3개년 업종별 창업기업수를 합계해 비중산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 업종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결정은 결국 청년창업기업의 생존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존속기업 기준으로 신생기업 전체의 창업 후 1년간 생존률⁵⁾은 62.7%인데 반해 20대 청년창업 기업은 53.4%, 30대 청년창업 기업은 62.2%로서 대체로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창업 3년간 생존률 역시 전체 기업 평균이 39.1%인데 비해 20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은 27.5%, 30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은 37.5%로 낮았다.

〈 표 3 〉 창업자 연령별 기업 생존률(2015년 기준)

(단위 : %)

조사연도	연령별 비중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년 생존률	53.4	62.2	65.1	63.5	60.0	62.7
2년 생존률	38.8	48.2	51.6	51.2	47.7	49.5
3년 생존률	27.5	37.5	41.5	41.2	37.6	39.1
4년 생존률	20.9	30.8	35.1	35.7	32.5	32.8
5년 생존률	16.2	25.8	29.9	30.6	27.5	27.5

자료 :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3. 중장년층 창업 지원 소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2018년 5월 발표한 2018년 1~3월 신설된 법인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른바 청년창업으로 분류되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법인은 전체의 28.2%에 해당하는 7,556개가 설립되었다. 반면 대표자가 40대 이상 법인은 전체의 71.8%, 19,141개가 설립되었다. 즉, 2018년 1분기에 신설된 청년창업 법인에 비해 중장년층창업 법인의 수가 2.5배를 넘는다.

반면, 정부가 2018. 3. 15.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청년창업펀드(6,000억원), 청년 창업자에게는 매출에 관계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면 감면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창업지원의 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들에게 편중되고 있다. 그 외에도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사관

5) ‘1년 생존률’은 해당연도(2015년)의 1년 전 신생기업 중에서 해당연도(2015)에 계속 활동 중인 기업의 비중을 의미함(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학교,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등 교육, 컨설팅,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40세 이상 중장년층 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니어 창업보증과, 창업진흥원의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센터’ 정도에 불과하다.

중장년층 창업이 청년창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정책은 주로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층 창업기업은 청년창업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창업자의 연령과 창업업종, 동 업계에서 쌓은 경력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면 비숙련창업자에 비해 숙련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숙련창업의 개념 및 지원 필요성

1. 숙련창업의 개념

숙련창업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된 연구나 법령상 정의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직관적으로는 특정 분야의 업무 또는 기술 등에 경험이 충분하고 능숙하게 숙련된 사람이 창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숙련의 사전적 의미는 ‘연습을 많이 하여 능숙하게 익힘’ 정도로 규정되고 있다. 학술적으로 활용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숙련은 ‘이성적, 연역적 학습을 통해 습득되기 보다는 반복적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인간의 신체 속에 ‘체화된 능력(embodied capacity)’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숙련은 외부적 관찰을 통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지식, 즉 ‘암묵지’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장홍근, 2009). 즉,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학력, 경력과 같은 근로자의 특성으로 파악하거나 직무의 복잡성 등 일자리의 특성과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학술적 의미의 숙련된 사람은 직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정부 정책적 관점에서의 숙련된 사람은 기술 및 제조 분야로 좁혀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따르면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바

탕으로 정부는 숙련기술인을 기술 및 기능계 인력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으로 한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등 우수 숙련 기술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진흥원의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Blue-Elite와 같은 보증상품은 지원 대상자의 조건으로서의 ‘숙련’에 대하여 정부 관점대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숙련된 창업자가 창업지원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다만, 최근들어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2017.4.19. 금융위원회), ‘정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대책’(2018.3.15. 관계부처 합동) 등이 발표되면서 기술 및 기능계 인력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숙련기술인 외의 타 업종에서 숙련된 창업자까지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최근의 숙련창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학술적 숙련 개념을 수용하여 숙련창업을 ‘분야에 상관없이’ 현장 등에서 관련 직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숙련자가 그 기술 및 능력을 살려 창업하는 경우 숙련 창업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숙련의 정도는 창업분야와 관련된 직무 경험을 쌓은 기간에 따라 구분하되 동 업계 경력이 5년 미만일 경우 비숙련자로, 5년 이상일 경우 숙련자로 볼 예정이다.⁶⁾

2. 정책 환경 및 숙련창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생존 전략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은 청년층의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1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이 2012년 7.5%, 2017년 9.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서도 주된 정책 방향이 청년층의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면 새로운 기업들이

6) 숙련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행의 EXPERT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기업은행은 동 업계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숙련창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대표적인 숙련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Blue-Elite 창업 보증의 전문인력 자격 및 경력 요건이 3~7년으로 되어 있어 그 중간값이 5년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비숙련창업과 숙련창업의 구분을 동 업계 경력 5년 이상으로 하였다.

끊임없이 생겨나고, 생겨난 기업들이 오래도록 생존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청년 창업이 아니라도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숙련인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함으로써 고용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환경 역시 숙련창업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1.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 및 그로 인한 숙련된 은퇴자의 증가

일반적으로 고령화 정도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고령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동 비중이 7~14%인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20%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65년에는 4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주요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평균 45년이 소요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18년(일본은 24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향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선진국이 약 30년, 우리나라는 약 8년(일본은 12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⁷⁾

〈 표 4 〉 인구 및 고령화 전망

구분	2000	2015	2020	2030	2050	2060	2065
총인구(천명)	47,008	51,015	51,974	52,941	49,433	45,246	43,024
고령인구 비중(%)	7.2	12.8	15.7	24.5	38.1	41.0	42.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 인구 추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가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 그리고 당사자인 고령층이 은퇴 후 생계에 곤란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수준까지 대비할 수 없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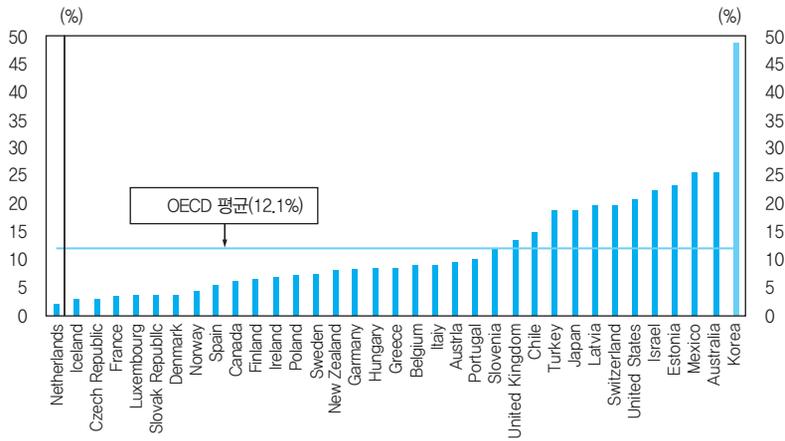
7) 박경훈 (2017)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한국은행 금융경제논총

과거 농경문화의 시대에서는 자녀가 부모세대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의무를 다하는 사적 부양의 시대였다. 그러나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 및 핵가족화는 과거와 같은 사적 부양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의 고령층과 곧 고령층에 진입할 베이비붐 세대들은 젊은 시절에 적정수준의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서는 사적 부양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고령층의 은퇴 후 적정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부양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화하기에는 우리 정부 역시 시간이 부족했다. 정부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소득공제 등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퇴직연금 가입 등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평균 수령액이 월 89만원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이 2018.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의 소득 대체율⁸⁾은 39.3%로 미국 71.3%, 프랑스 60.5%, 일본 57.7% 등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최대 30%p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층 중 은퇴 후에 적정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고령 인구의 빈곤률로 나타난다. 2014년 기준으로 고령인구의 빈곤률을 비교해 볼 때 OECD 평균은 12.1%인데 반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빈곤률은 48.8%로 OECD 평균의 4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 그림 2 〉 OECD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빈곤률¹⁾²⁾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주 : 1) 2014년 기준

2) 국별로 균등화된 가처분 가구소득이 국별 중위값보다 낮은 사람들의 비중. 자산소득 포함

8)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액(공적·사적연금 모두포함)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 고령인구의 자살률은 2016년 통계청 기준 인구 10만명 당 53.3명으로 OECD 평균 노인 자살률의 3배 수준이며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자살률이 높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빈곤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령층이 은퇴 후 사용할 노후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인구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이외에 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위해 은퇴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경기침체, 전체 일자리 수의 감소,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평가 등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성 및 숙련된 기술 등을 가진 고령층 은퇴자에게 숙련된 분야에 대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령층에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와 고령화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2. 경기민감 업종의 구조조정 심화로 숙련 노동자의 실업 증가

경기침체에 따라 조선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시행 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된 인력규모의 축소가 2017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선업 전체 종사자 수가 약 3만 7천명이 감소했고, 2017년은 4월까지 약 2만 7,7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2015년 11월 제 2차 정부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민감업종으로 5개 업종을 지정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부문 종사자수는 약 200만명 수준으로 2015년 전체 제조업 종사자수 455만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들 경기민감업종에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조정된 인력들이 적정 수준의 소득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숙련된 실업자들이 재취업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동일 업종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여력이 없고, 타 업종 기업은 이들의 숙련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숙련된 노동자들을 다시 산업전선에 뛰어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전문성을 살린 숙련창업이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노키아의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숙련 창업을 활성화시켜 침체되었던 핀란드 경제를 V자 반등 시킨 사례가 있다.

2.3.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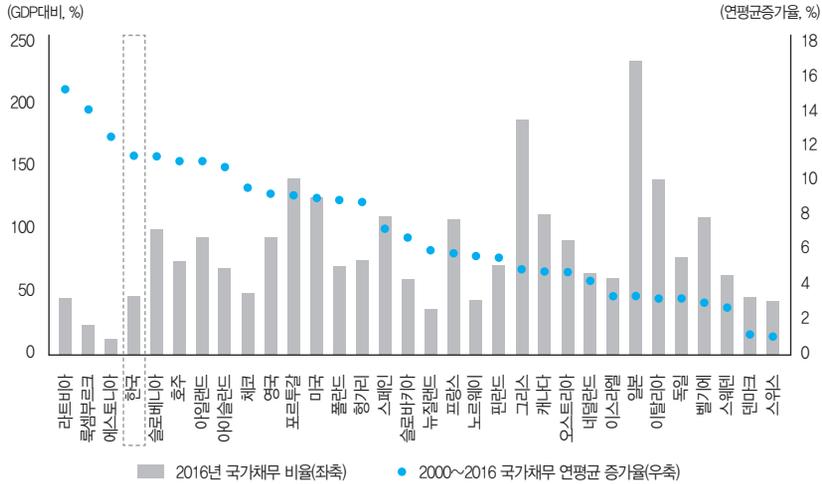
2016년 3월 구글이 소유한 인공지능기술 개발업체인 딥마인드가 만들어낸 알파고(AlphaGo)와 한국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바둑대결을 벌였다. 이 대결의 최종결과는 4승 1패로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인간대표인 이세돌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알파고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과거에 단순노동을 대체한 로봇기술을 넘어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인간의 인지와 판단이 필요한 고차원적인 노동시장에서까지 인간의 도태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택시, 버스 기사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자율주행자동차의 출현과 같은 현상은 이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에 일자리를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해 내는 것만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청년만의 전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폭 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숙련 창업자들은 청년 창업자들에 비해 훨씬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높다.

2.4.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채무 증가속도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38.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라트비아(15.7%)와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1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가 채무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적절한 정책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그림 3 〉 OECD국가의 국가채무 비율 및 증가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알기쉬운재정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3% 내외의 저성장애 직면해 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복지 관련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등 정부 재정소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경제성장률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복지지출, 고령화 관련 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 현재의 재량지출을 세출 구조조정 없이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6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부 재정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부문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현재 창업분야에 투입되는 재정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IV. 숙련도별 창업기업의 부실률 및 고용창출 현황 –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중심

앞에서 중장년층 창업이 청년 창업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우리가 처한 정책 환경이 숙련창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 숙련창업자를 지원한 경우 비숙련창업자를 지원한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방법

창업초기에는 소요되는 자급에 비해 기업의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보증기금은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건수가 많으며 다양한 특성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36,955개이며, 이 중 2017년에 신설된 기업은 5,303개이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대표자의 동업계 경력이 창업기업의 부실발생 여부와 고용창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여 비숙련창업 기업과 숙련창업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⁹⁾

1.1 부실률 현황

2011년 및 2012년에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대표자에 대한 동업계 경력정보가 존재하는 기업은 10,048개(비숙련 8,922, 숙련 1,126)로 나타났다.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와 같이 기업의 생존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도에 보증을 해지한 기업의 경우 창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존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휴·폐업 정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생멸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증 부실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9) 재무성과에 대한 비교도 시도 하였으나, 창업기업의 재무정보는 대한 자료는 최초 보증 시점 또는 추가보증 발생 시점에만 수집되고 있어 비교대상 기업 중 5개년 연속된 기업재무정보가 확보되지 못한 기업이 많아 본 보고서에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기업에 대한 보증부실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5년이 되기 전에 보증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증종료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였는지에 따라 부실여부를 구분하였다.

1.2. 고용창출 현황

2011년 및 2012년에 신설되었으면서 신설된 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의 보증지원 후 5년간 일자리 창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보증계약은 보증기업의 성장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 등으로 인해 계약해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보증계약해지 시점 이후의 고용정보 수집 한계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위 부실률 비교대상 기업 중 보증개시 5년 후까지 보증계약 해지가 없어 고용정보¹⁰⁾를 확인 가능한 기업 3,571개(비숙련 3,147개, 숙련 424개)만을 비교하였다.

2. 부실률 및 고용창출 비교 결과

2.1 창업기업 대표자의 숙련도별 부실률

2011년 및 2012년에 보증 받은 신생기업 중 비교대상 10,048개(비숙련 8,922개, 숙련 1,126개) 기업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10)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 표 5 〉 창업기업 숙련도별 부실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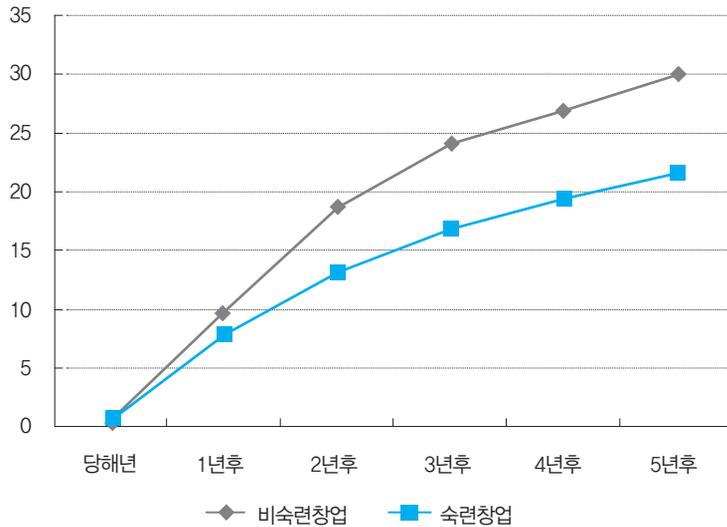
(단위 : 개, %)

구분		기간	정상보증(1)	정상해지(2)	부실보증(3)	부실해지(4)	부실기(3+4)	부실률
비 숙 련 창 업 기업	2011년 신설법인 (5,218개)	당해년	5,195	1	9	13	22	0.4
		1년후	4,224	503	73	418	491	9.4
		2년후	3,283	917	87	931	1018	19.5
		3년후	2,685	1,220	57	1,256	1313	25.2
		4년후	2,295	1,457	35	1,431	1466	28.1
		5년후	1,851	1,741	16	1,610	1626	31.2
	2012년 신설법인 (3,704개)	당해년	3,674	3	10	17	27	0.7
		1년후	2,930	404	59	311	370	10
		2년후	2,413	636	60	595	655	17.7
		3년후	2,010	860	47	787	834	22.5
		4년후	1,753	1,008	28	915	943	25.5
		5년후	1,343	1,302	20	1,039	1059	28.6
	합계 (8,922개)	당해년	8,869	4	19	30	49	0.5
		1년후	7,154	907	132	729	861	9.7
		2년후	5,696	1,553	147	1,526	1673	18.8
3년후		4,695	2,080	104	2,043	2147	24.1	
4년후		4,048	2,465	63	2,346	2409	27	
5년후		3,194	3,043	36	2,649	2685	30.1	
숙 련 창 업 기업	2011년 신설법인 (582개)	당해년	578	1	2	1	3	0.5
		1년후	457	81	5	39	44	7.6
		2년후	372	137	6	67	73	12.5
		3년후	313	177	3	89	92	15.8
		4년후	266	211	5	100	105	18
		5년후	216	250	4	112	116	19.9
	2012년 신설법인 (544개)	당해년	537	0	2	5	7	1.3
		1년후	428	71	5	40	45	8.3
		2년후	362	105	4	73	77	14.2
		3년후	310	136	4	94	98	18
		4년후	261	168	4	111	115	21.1
		5년후	217	199	2	126	128	23.5
	합계 (1,126개)	당해년	1,115	1	4	6	10	0.9
		1년후	885	152	10	79	89	7.9
		2년후	734	242	10	140	150	13.3
3년후		623	313	7	183	190	16.9	
4년후		527	379	9	211	220	19.5	
5년후		433	449	6	238	244	21.7	

대표자가 동업계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비숙련창업 기업을 살펴보면 2011년에 신설된 기업은 5,218개였으나 이 중 5년 후에 부실상태에 있거나¹¹⁾ 대위변제하여 보증이 해지된¹²⁾ 기업은 1,626개로 31.2%의 부실률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신설된 기업은 3,704개 였으나 5년 후 부실기업의 수는 1,059개로 28.6%의 부실률을 보이고 있다. 2개년도를 합계한 비숙련창업 기업의 법인 설립 후 5년간 부실률은 총 8,922개 기업 중 2,685개 기업이 부실화되어 30.1%의 부실률을 보였다.

대표자가 동업계 경력이 5년 이상인 숙련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에 582개에서 5년 후 116개가 부실화되어 19.9%의 부실률을 나타냈고, 2012년은 544개 기업에서 5년 후 128개가 부실화되어 23.5%의 부실률을 나타내었다. 2개 년도를 합계할 경우 숙련창업 기업의 5년간 부실률은 총 1,126개 기업 중 244개 기업이 부실화 되어 부실률이 21.7%로 나타났다.

〈 그림 4 〉 숙련도별 창업기업 부실률



비교결과 숙련창업 기업의 부실률이 비숙련창업 기업의 부실률에 비해 8.4%p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년 이상의 동업계 경력을 가진 대표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보증제공에 대한 리스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 <표5>의 부실보증

12) <표5>의 부실해지

2.2. 창업기업 대표자의 숙련도별 고용창출 현황

2011년 및 2012년에 보증을 받은 신생기업 중 비교대상 기업 3,571개(비숙련 3,147개, 숙련 424개)를 대상으로 확인한 고용창출 현황은 아래 <표 6>와 같다.

< 표 6 > 고용창출 현황¹³⁾

(단위 : 개)

구분		최초 보증시 (A)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B)	5년간 창출수 (B-A)	
비 숙 련 창 업	2011년 (1817개)	일자리 수	2,918	3,731	4,099	4,499	4,756	4,848	1,930
		기업 당 평균	1.61	2.05	2.26	2.48	2.62	2.67	1.06
	2012년 (1330개)	일자리 수	2,920	3,646	4,121	4,500	4,641	4,536	1,616
		기업 당 평균	2.20	2.74	3.10	3.38	3.49	3.41	1.22
	합계 (3147개)	일자리 수	5,838	7,377	8,220	8,999	9,397	9,384	3,546
		기업 당 평균	1.86	2.34	2.61	2.86	2.99	2.98	1.13
숙 련 창 업	2011년 (213개)	일자리 수	887	1,286	1,384	1516	1,605	1,670	783
		기업 당 평균	4.16	6.04	6.50	7.12	7.54	7.84	3.68
	2012년 (211개)	일자리 수	1,452	1,737	1,949	1,905	1,872	1,817	365
		기업 당 평균	6.88	8.23	9.24	9.03	8.87	8.61	1.73
	합계 (424개)	일자리 수	2,339	3,023	3,333	3,421	3,477	3,487	1,148
		기업 당 평균	5.52	7.13	7.86	8.07	8.20	8.22	2.71

대표자가 동 업계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비숙련창업 기업을 살펴보면 2011~2012년 최초 보증 시 3,147개 기업이 5,838개 일자리 수로 1개 기업당 평균 1.86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5년 후에는 9,384개 일자리 수로 1개 기업당 평균 2.98명개로 늘어났다. 최초 보증 후 5년 동안 3,54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1개 기업 당 평균 1.13개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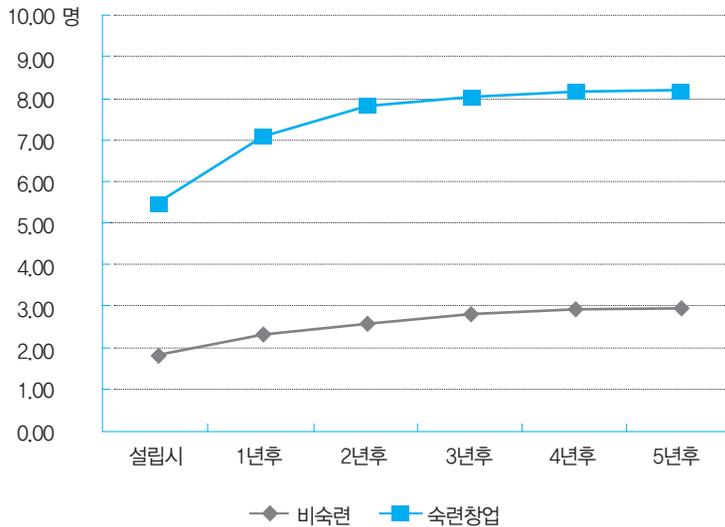
대표자가 동 업계 경력이 5년 이상인 숙련창업 기업을 살펴보면 2011~2012년에 신설된 기업 합계

13) 보증잔액 1억원 당 일자리 창출규모의 5개년 평균치는 비숙련창업 0.21명, 숙련창업 0.20명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증계약 정상해지율을 고려한다면 숙련창업기업의 보증잔액 1억원당 일자리 창출규모가 다소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보증 시 414개 기업이 2,339개 일자리 수로 1개 기업 당 평균 5.52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5년 후에는 3,487개 일자리 수로 기업당 평균 8.22개로 늘어났다. 최초 보증 후 5년 동안 1,14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1개 기업 당 평균 2.71개 증가한 것이다.

비교결과 숙련창업이 비숙련창업에 비해 설립 시점 이후 5년간 기업 당 평균 1.58개 정도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¹⁵⁾

〈 그림 5 〉 숙련도 별 창업기업 고용현황



추가적으로 위 고용창출 현황에서 제외된 보증해지 기업의 정상해지율을 위 <표5> 부실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비숙련창업기업의 정상해지율은 총 5,692개 기업 중 3,043개 기업이 정상해지하여 53.5%이고, 숙련창업기업은 687개 기업 중 449개 기업이 정상해지하여 65.4%의 정상해지율을 보였다. 숙련창업기업의 정상해지율이 비숙련창업기업에 비해 11.9%p 더 높다.

고용창출 현황에서 제외된 보증계약 해지기업의 정상해지율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숙련창업기업과 비숙련창업기업의 고용성과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14) 숙련창업의 경우 창업자의 연령이 많고 자산축적 정도 등에서 비숙련 창업자에 비해 우위에 있어 초기 고용 규모가 크다.

15) 비율지표는 초기 고용규모가 너무 작아 사용할 경우 성과왜곡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 예를 들어 1명 고용기업이 1명을 더 고용할 경우 고용 증가율이 100%로 계산됨

V. 정책적 시사점 : 숙련창업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 창업자의 숙련정도에 따른 부실률과 고용창출 현황을 비교한 결과 숙련창업기업의 부실률이 낮고 기업 당 고용창출 효과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화를 비롯한 정책 환경과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고려할 때 청년 창업을 지원 중심의 정부 창업정책을 이제는 숙련창업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그런 점에서 2017년 4월 발표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에는 숙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의 EXPERT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의 Blue-Elite 창업 보증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숙련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7년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사내 분사형 창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Blue-Elite 보증상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검토한 숙련창업 지원 기능에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1)자격, 2)학력, 3)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 기사 등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경력 일정정도 보유한 자 등 이고, 학력요건은 지적재산권 분야와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연구원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력요건 역시 지적재산권 분야와 이공계 분야 연구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 요건들을 보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협소한 숙련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야와 이공계 분야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제한하여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 현장에서 숙련된 경험을 가진 유통기업 예비창업자나 유명 음식점에서 경력을 쌓은 요리사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숙련창업자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숙련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숙련창업 전문 보증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Blue-Elite 보증 상품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은행의 EXPERT 프로그램과의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숙련창업자의 기업가적 특성 즉, 도전성, 경력분야 및 수준,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청년창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창업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숙련창업을 지원과 균형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숙련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정기획자문위(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
2. 국회예산정책처(201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3. 권우현, 강병구, 강민정(2009), 「장기실업자의 구직활동 및 재취업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4. 기획재정부(2015), 「2060년 장기재정전망」
5. 박경훈 (2017),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pp.19-80
6. 안상봉, 신용준(2017),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경영사학 vol 39, 한국경영사학회
7. 양현봉(2017),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i-KIET산업경제이슈 제37호, 산업연구원
8. 이장균(2017),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VIP리포트 17-15호, 현대경제연구원
9. 장홍근(2009), “숙련개발체제와 노사관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 조봉현, 서경량, 문태성 (2017), 「이제는 숙련창업이다」, IBK경제연구소
11. 중소벤처기업부(2017), 「2017년 창업지원사업」
12. 창업진흥원(2017), 「창업기업실태조사」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참고보도

1. 서울경제, “한국청년, 실패 두려움에 창업 주저”, 2018.01.30.
2. 서울경제, “S리포트 영터리 중소기업통계 중기 상징 ‘9988’의 함정”, 2018.04.19.
3. 신동아 5월호, “생계형 청년창업 현주소“, 2018.05.06.
4. 아시아경제, “노동연구원 문정부 1년, 일자리정책 효과 안나타나”, 2018.05.13.

참고사이트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2.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
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4.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5.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6.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8.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ised.or.kr)
9.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홈페이지(www.koshipa.or.kr)
10. K-스타트업(창업넷) 홈페이지(www.k-startup.go.kr)